

동물복지와 축산산업



정태호
중부대학교 동물자원학과 교수
한국동물복지학회 상임이사
taehochung@joongbu.ac.kr

1. 축산산업과 동물복지

축산산업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동물성 단백질을 공급하는 식량산업으로 국가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인의 평균신장은 1979년 167.4cm에서 2010년 173.6cm로 불과 30여년 만에 6.2cm나 커졌으며, 전문가들은 이는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여 균형적인 영양소 섭취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실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육류(소·돼지·닭고기) 소비량은 1975년 6.4kg, 1980년 11.3kg, 1990년 19.9kg, 2000년 31.9kg, 2010년 38.8kg 등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1인당 우유 소비량도 1975년 4.6kg에서 2010년엔 64.9kg으로 늘었다. (농민신문 2013년 1월호) 이렇게 축산 산업은 농촌 경제의 성장 동력인 동시에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국가 기반산업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최근 축산산업이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혐오산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그 가치가 점점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한국의 축산산업은 한미 FTA와 한EU FTA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국가산업으로서의 비중이 걸맞는 지속가능한 축산산업 발전을 위한 세밀한 정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2011년 타결된 한EU FTA 협상시 EU측에서 제시한 동물복지형 축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데, 농림수산식품부는 FTA의 발효 시기에 맞추어 동물복지에 대한 정보, 전문지식 및 경험을 교환하고 동물복지 분야에 대한 협력과 동시에 국내 동물복지 기준 제정을 위해 발빠르게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현재도 관련 수의사 및 축산 단체와 전문가들이 합심하여 국내 동물복지의 향상과 국내 축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동물복지의 필요성

OIE(국제수역사무국)는 건강하고, 안락하며, 좋은 영양 및 안전한 상황에서 본래의 습성을 표현할 수 있으며, 고통, 두려움, 괴롭힘 등의 나쁜 상태를 겪지 않는 것"을 동물복지의 개념이라 설명하고 있다. 당시 EU측에서 협상카드로 제시한 2012년부터 산란계의 케이지 사육을 금지하고 2013년에 모돈 및 임신돈의 스톨(금속틀) 사육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이 그대로 수용하기는 힘든 것임을 주지한 바 있으며, 점진적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정부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동물복지를 실천하는 축산 농장을 지원하여 동물복지를 실천하는 축산 농장의 확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가 동물복지를 강화하는 것은 국내 축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한EU FTA 뿐 아니라 다가오는 세계 각국과의 FTA를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으며 식량을 위해 사육되는 가축들이 살아있는 동안 생명권과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실천하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계속 강화되고 있다. '축산 공장화'로 고기가 대량 생산되고 돌고래처럼 오락용으로 동물 이용이 증가하는 데 따른 반작용이다. 실제로 치킨집에 대량 공급되는 암탉 중엔 다리나 날개가 쉽게 부러지는 게 많다고 한다. 암탉은 자연상태에선 연간 30개 정도의 알을 낳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사육장의 암탉은 좁은 틀안에서 연간 300개 이상의 계란을 생산한다. 이때 칼슘이 다 빠져 나가 골다공증에 걸려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되는 탓이다. 미식가들이 즐겨찾는 거위간은 틀안에 갇혀 목만 내놓은 거위의 위에 튜브로 음식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대량 생산된다. 거위를 못 움직이게 하고 영양분만 주면 간이 비대해지고 그만큼 공급하는 양은 많아진다. 미국 환경운동가 게일 아이스니

츠는 저서 <도살장>에서 소들이 숨이 끊어지지 않은 채 컨베이어벨트 위에서 절단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3.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

현재 동물권보호 확대는 대세라고 할 수 있다. EU는 닭을 한 군데서 모아 키우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 중이며, 세계동물보호협회는 방목 유기농 축산품만을 사고 파는 운동을 펴고 있다. 동물복지에 동물학대를 방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동물보호·복지로 확대되면서 동물복지에 관한 제도와 법률들이 강화되고 있다. 영국에서 세계최초로 1876년에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미국과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동물보호 관련 법률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OIE(세계동물보건기구)는 가축 운송·도축 및 살처분에 대한 지침 제정, 육계와 육우에 대한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세밀하게 고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2년 부터 산란계를 시작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3년 부터는 양돈 농장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인증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있다. 축산분야에서 동물복지에 축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고품질의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동물복지를 고려한 적절한 가축의 관리, 운송과 도축은 가축의 스트레스를 줄여줌으로써 이상육(돼지의 PSE, 육우의 DFD)의 발생을 낮춰 보다 고품질의 고기를 생산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의 감소는 가축의 면역력을 향상시켜 질병의 발생빈도를 줄이고, 항생제 등 약품의 남용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동물복지와 관련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대응하고 축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동물복지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개발과 동물의 상태를 이해하는 동물행동학 분야의 연구가 요구되고 있으며, 앞으로 국내 사육여건과 국제적 동물복지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동물복지형 대체 사육시설의 연구도 병행 되어야 한다.

4. 국내 축종별 동물복지 현황

최근 시행되고 있는 국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 돼지, 닭, 오리농장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게 되는 제도이다. 국내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는 2012년 산란계 농장을 시작으로 2013년 돼지, 2014년 육계, 2015년에는 한우와 젓소 사육 농장 등으로 확대된다. 산란계 농장에서 동물복지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 산란계의 위생 및 질병 등에 관한 사항을 2년 이상 기록물로 보관하여야 하고, 조명, 사육밀도 등 적합한 사육환경을 유지하여야 하는 등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산란계를 사육하여야 한다. 인증받은 농장 및 해당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은 동물복지 축산농장 표시기준에 따라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5. 동물복지의 미래와 수의사의 역할

농장동물의 복지는 과연 동물에게도 사람과 동일한 도덕적 기준을 적용시킬 수 있는가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데서 지금도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인간과 동물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관점이라기보다는 인간이 동물을 이용하는 데 있어 단순한 식품에 불과할 뿐이라는 개념보다 윤리적 책임의 관점에서 동물에게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농장동물복지의 진정한 의미라 할 수 있다.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우리들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도 이로움을 유지시켜 줄 것이며, 이는 곧 소비자 자신과 가족들의 건강을 위한 매우 가치 있는 희생이 될 것이다. 2008년 대한수의사회는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인식 확대와 동물보호법의 정착을 위해 세계수의사회에서 권고하는 동물복지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그 내용처럼 21세기 선진국의 선진국민으로서 동물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데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수의사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그림. 2012년 3월 도입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마크